

“美 흔들릴 때가 기회… 글로벌 분산 투자 지금이 ‘적기’”

강연

염승환 이사
LS증권 리테일사업부

트럼프 리스크에 美 증시 흔들
일본·유럽 부동산 등 대안 부상
“AI·증권 등 韓 시장 반등여력 충분”

“미국 증시가 흔들리는 지금이야말로 투자자들은 한국, 일본, 유럽 등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염승환 LS증권 리테일사업부 이사는 지난 25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에 시장이 출렁이는 상황”이라며 “지금이야말로 글로벌 시장을 다각도로 살펴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우려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 해소 ▲부채 축소 ▲제조업 부흥이란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비즈니스 관점에서 ‘주는 것만



염승환 LS증권이사가 2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메트로미디어 주최로 열린 ‘2025 100세 플러스 포럼’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많고 받은 게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안보 제공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염 이사는 “특히 관세를 세수 확보, 제조업 부활, 투자 유치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미국이 재정 적자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출 축소와 민간 자산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는 최근 미국 자산가들 사이에서 탈(脫)미국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염 이사는 “로마, 파리 등 유

럽 주요 도시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미국 자산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자산 분산이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미국 외 국가들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독일은 5000억 유로 규모의 펀드를 조성,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은 민간기업 투자를 장려하는 등 시진핑 주석의 경제 정책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금리 인상을 준비 중이고, 한국 역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시장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분석했다.

염 이사는 “미국의 글로벌 주식 비중이 64%에 달하지만 향후 추가 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반면 한국은 낮은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과 높은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을 고려할 때 반등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경우 윈도우 업데이트 종료와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 지출 확대에 따라 반도체 수요가 살아날 가능성이 크며, 3분기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공매도 해제, 상법 개정, 추경 등 여러 호재가 겹친 한국 증시에 대해 단기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염 이사는 투자 전략에 대해 “미국 중심의 투자 시대는 끝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 일본, 유럽, 채권, 원자재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한다”며 “워런 버핏이 일본 주식을 매입한 것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결정으로 일본 기업들은 배당 성향이 높고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투자 매력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투자 사이클에 대해서는 반도체 장비 중심의 초기 단계가 마

무리되고, 이제는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로봇 등으로 옮겨가는 전환기라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 BYD의 급속 충전 기술이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부품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배당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지난해 은행주가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해소된 대형 증권사들도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거래 시간 확대와 상법 개정으로 증권업 전반에 유동성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염 이사는 미국 증시가 불안정할수록 트럼프의 정책 기조와 발언을 면밀히 살펴야 하며 지금은 과거와 다른 분산 및 전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는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감세 법안이 올해 말 자동 폐기될 예정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연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감세 정책이 지속되면 미국 증시의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다시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광희 기자 wkh@metroseoul.co.kr

“노후 자산, ‘곳간’보다 ‘우물’이어야”

강연

김동엽 본부장
미래에셋투자외연금센터

현금흐름 기반 자산 설계 강조
노후 소득공백 대응 전략 필요

“나이를 먹으면 자린고비가 된다. 돈이 사라질까봐 불안해서 못 쓰는 것이다. ‘곳간’이 아닌 ‘우물’ 형태의 자산을 형성해야 한다. 노후에는 일정 수준의 현금흐름 창출이 요구된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외연금센터 본부장은 ‘2025 100세 플러스 포럼’에서 ‘은퇴준비와 작지만 확실한 테크’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노후에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선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다지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노후생활비 마련 ▲연금맞벌이 ▲연금계좌 ▲종신보험 점검 등 노후준비 요령을 공유했다. 이어 노후준비 방안을 반드시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부부에게 필요한 최소 노후생활비는 월 248만원이다. 이를 필요 적정 노후 생활비로 확대해서 살펴보면 월 337만원으로 증가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퇴직한 부부가 양질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매달 337만원이 필요하다. 퇴직 후 월 200만~300만원의 현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것.

김 본부장은 ‘연금 맞벌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부가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의 종류와 시기, 액수 등을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외연금센터 상무가 강연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파악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과 ‘통합연금포털’에서 연금 수령 수준과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1988년 이후 군복무를 마쳤다면 연금수령 기간을 늘릴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군복무 1개월당 3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장기적으로 연금수령액은 증가하지만 지급 건보료와 기회비용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문제는 연금만으로 노후 생활비 마련이 어렵다는 점이다. 김 본부장은 주택연금과 종신보험을 눈여겨보라고 당부했다. 주택연금이란 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 상품이다. 주택을 담보로 배우자와 본인의 사망 시기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사망 후 주택 가격이 수령연금보다 낮아져도 차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자녀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주택가격이 더높을 경우에는 차액을 배우자 혹은 상속자에게 증여할 수 있다. 단 연금의 액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는 만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고된다면 주택연금 가입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종신보험 약관 확인도 요구된다. 김 본부장은 종신보험에 기재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등 개념을 명확하게 숙지하라고 강조했다. 종신보험은 계약자가 보험금을 납부한다.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상당수의 중장년층이 피보험자와 수익자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 구분을 여쭙으면 90%는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틀린 대답을 한다.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증서를 펼쳐 다시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했다.

문제는 연금 수령 전 ‘소득공백’ 시기다. 이때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연금을 정상 수령의 70%만 지급하지만 소득공백 시기를 지울 수 있다. 일반적인 수령자가 조기수령자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선 73~75세가 지나야 한다. 건강상태와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0대라면 연금계좌 전략이 필수다. 절세와 노후준비를 한번에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IRP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연간 90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추가 납입을 원한다면 ISA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ISA계좌에 3년간 가입한 후 60일 이내 ISA계좌에 재가입하거나 만기 납입하면 된다. 연간 추가납입액의 10%를 300만원까지 세액 공제한다.

김 본부장은 “세상을 바꾸는 것은 생각 아닌 행동이다. 사람들은 어제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한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행동으로 옮겨야 내일이 바뀐다”고 강조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유산취득세 도입… 새 절세 전략 필요”

강연

호지영 세무사
우리은행 세무컨설팅팀

상속세, 75년 만에 개정 초읽기
공제 확대·납세 방식 등 변화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컨설팅팀 세무사는 “최근 떠오르는 이슈 중 하나는 75년 만에 대수술에 들어가는 상속세”라며 “상속세가 대대적인 개편을 앞둔 만큼, 바뀌는 법안 내용에 적합한 절세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지영 세무사는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자산가들의 절세노트 훑쳐보기’ 강연에서 “이번 상속세 개편에 따라 유산세가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고, 인적 공제를 상향한다. 상속인들의 납세의무도 따로 부과하게 된다”며 “오는 2028년 예정된 법안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절세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서 호 세무사는 ▲상속세 개편 주요 내용 ▲유산 취득세 도입 이후 세금 부담 시뮬레이션 ▲상속 절세 전략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증여 등에 대해 강연했다.

호 세무사는 “물가 상승, 집값 상승으로 상속세의 공제 한도인 10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분들이 많아졌다”며 “지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상속세를 내는 사람의 비중이 14배 가량 올랐고, 이에 상속세를 개편하자는 움직임이 몇 년 전부터 생겨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아가 중장년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상속세 개편안은 18~20억을 기준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자산이 20억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컨설팅팀 세무사가 강연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이 넘는 분들은 상속법 개편에 따른 새로운 상속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주문했다.

호 세무사는 “상속세가 유산 취득세로 변경되면서 인적 공제가 상향되고, 상속 시 납세의무도 상속분에 따라 별도로 부과하게 된다”며 “최적의 분배 방안을 마련해, 상속 시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호 세무사는 생전에 가족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여순서에 따라라도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증여 시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수증자의 소득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공제 기준이 지난 10년간이라는 부분도 인지해야 한다”며 “혼인·출산 시에도 증여에 대해 별도의 공제 한도가 제공되는 만큼, 증여 시 최적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호 세무사는 마지막으로 “향후 개편되는 법안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 각자에게 적합한 최적의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승진 기자 asj1231@